

## 북한의 2.10 핵 보유 선언: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이상현(미래연 남북국제연구위원회 간사 / 세종연구소)

### I. 2.10 외무성 성명: 북핵 문제의 새로운 국면인가?

북한은 2월 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 참가 명분이 마련되고 회담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인정될 때까지 불가피하게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성명은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명료한 표현으로 핵무기 보유를 처음으로 공식 선언하였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된 북한 외무성의 10일자 성명은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허를 찌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발표는 지난 2월 2일 부시 미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인내심을 발휘한 후 제4차 6자회담이 조기에 재개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낙관했던 참가국들의 예상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이에 따라 6자회담은 당분간 표류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부시 2기 행정부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대화의 틀인 6자회담 구도마저 와해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때문에 북한의 2.10 외무성 성명은 매우 실망스럽고 우려되는 바가 크다.

북한은 왜 6자회담 재개를 앞둔 시점에서 이처럼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 북한의 의도에 대한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은 북한의 핵 보유 언급이 부시 행정부에 대해 배수진을 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 다음 4년간 끌려 다니기보다는 핵 보유 선언이라는 좀 더 센 카드를 분명하게 보여준 뒤 새로운 협상테이블을 마련하려는 협상전략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이 협상용인지 아니면 실제 핵 보유를 선언한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이 몸값을 올리기 위해 예의 벼랑 끝 전술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북한에 대한 대부분의 분석이 그렇듯이 현재로서 북한 핵 보유 선언의 진위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외무성 성명은 6자회담 재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나도는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북한의 관영매체들은 '핵 억제력 보유' 정도로 핵무기 보유를 주장해왔으며, 북한 당국도 6자회담장에서 미국 측에 핵무기 보유를 간접적으로 밝혀왔다. 이에 대해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의 핵 관련 주장을 협상력 제고를 위한 액션 정도로 이해해왔다.

그러나 이번 성명은 과거의 주장에 비해 외무성 성명이라는 공식 언론을 통해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비중을 달리한다. 외무성 성명은 특히 세 가지 사안을 들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취임사와 국정연설, 그리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지명자의 인준청문회 발언이 그것이다. 성명은 이 세 가지 연설에서 드러난 미국의 대북정책이 본질적으로 변한 것이 없고 북한과 공존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즉 미국이 '제도전복'에 바탕을 둔 적대시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내부분열 와해책동'을 포기하지 않는 한 6자회담에 참가하는 것이 무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노리는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된다. 첫째, 외무성 성명은 북한의 체제를 뒤흔드는 미국 조야의 발언에 대해 경고하는 메시지의 성격을 띤다. 둘째, 북한 내부의 강경파를 다독거리고 흔들리는 민심을 추스르는 체제 내부결속을 강화하려는 포석을 지닌 것이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국내외 여건 속에서 맞는 노동당 창건 60주년을 새로운 각오로 맞으려는 김정일 체제의 몸부림인 것이다.

그 동기가 무엇이든 북한의 이번 핵 보유 선언은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정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것과, 앞으로는 지금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한다. 북한의 이번 핵 보유 선언은 북한의 위협이 점점 증대되고 있으며, 부시 행정부로서는 이에 대처할 효과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우리 국내적으로는 햇볕정책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현 시점은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의 파장을 면밀히 분석하여 새로운 접근을 모색할 때이다.

## II. 북핵 보유 선언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반응

우리는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과연 북한은 실제로 핵폭탄을 만들었고 이를 보유하고 있을까? 국가안보를 다루는 최선의 방법은 최악의 경우, 즉 북한의 핵이 실재한다고 전제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핵 보유 선언에 대해 지금 우리 사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은 상당히 이상한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데 정작 그 핵무기의 가장 큰 위협을 받는 우리는 애써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았을 것으로 추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북한 핵문제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직접적인 당사자다. 남북한의 대치상태는 아직 평화체제로 가기에는 너무나 멀고,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막대한 금액을 국방예산으로 쓰면서 북한과의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적어도 북한이 노동당 규약에 명시된 한반도 적화

통일이라는 국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비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장은 이런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가공할 사태다. 그런데도 정작 우리 정부는 아직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이 협상용일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고,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로 보여주기 전까지는 북한의 핵 보유를 믿지 않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역사는 꽤 오래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70년대부터 구소련의 도움으로 핵개발을 시작했고, 이미 90년대 초에 핵 문턱을 넘어선 것으로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러한 역사가 말해주듯이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3대 요소인 기술, 원료물질, 정치적 의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 그 위에 이제 북한 스스로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우리로서는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만들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전제하고 북한 핵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2월 15일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한 분석에 의하면 북한은 조잡한 수준의 핵무기 1~2개를 개발했을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미사일에 탑재해 발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비행기에 실어 투하할 수 있는 히로시마 스타일 재래식 핵무기인 것으로 보인다. 만일 북한의 핵 보유가 사실이라면 우리의 대북정책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햇볕정책 이래 우리 대북정책의 핵심가정은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을 지속하면 언젠가는 북한이 변하리라는 것이었다. 물론 햇볕정책의 논리에는 타당한 일면이 있다. 무력에 의한 강압보다는 북한체제에 자본주의와 자유세계의 입김을 쏘여서 북한이 스스로 변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훨씬 더 효과적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언젠가는 북한이 변하겠지 하는 희망만으로 급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인내와 비용을 무한정 퍼부을 수는 없다.

현재까지 드러난 한국정부의 대응은 한미 외무장관 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기자회견과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서 짐작할 수 있다. 반 외교통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 없이 대규모 남북경협을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했고, “6자회담 복귀 조건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인도적 차원에서 제한된 수준의 경협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미국 측에 전달했으며 미국도 이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우리가 유의해 볼 것은 우선 미국의 반응이다. 일단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에 대해 새로운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다.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의 발표가 ‘예전에 들었던 말’이라면서 미국은 여전히 6자회담을 원한다고 말했다. 유럽을 방문중인 라이스 국무장관도 북한의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는 세계로부터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2월 14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중단 선언을 협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정면대응을 하지 않는 대신 북한의 회담복귀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대북 전방위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미 양국 외무장관회담에서 '북한의 회담 복귀를 위한 조치들을 집중적으로 발빠르게 취하기로' 한 데 이어, 백악관과 국무부는 "화폐 위조, 마약거래 등 북한의 불법활동을 미국의 사법당국이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한의 의도를 '협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외교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했다. 북한의 '핵보유' 선언을 묵살하고 대신 중국 등을 통한 6자회담 복귀 설득에 주력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6자회담 과정의 붕괴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계속 준수돼야 하고 북한의 핵물질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는 신 북핵3원칙을 제시했다.

향후 미국은 북한을 6자회담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가급적 인내심을 발휘하려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부시 행정부의 선택지 중에 북핵 용인이라는 옵션은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미국대사와 한국측 수석대표 송민순 차관보가 각각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과 회담을 가진 것은 향후 중국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임을 시사한다. 미국은 그동안 대화와 설득을 강조해 온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는 데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 III. 북핵 문제의 새로운 접근 모색

현 시점에서 한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제는 북한 핵에 대해 좀 더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 되었다.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 온갖 추정만 하는 있는 동안 북한의 핵 보유는 점점 더 사실이 되어가고 있다. 북한의 핵 보유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기 전에 과감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한국 정부는 북핵 불용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해야 한다. 북한의 핵 보유는 탄도 미사일과 함께 한반도 전역은 물론 일본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된다. 일본은 북한의 핵 보유를 자신의 핵무장 정당화 논리로 적극 활용할 것이고, 일본의 핵무장은 대만과 중국의 핵 태세에도 연쇄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결국 북한의 핵 보유는 동북아의 핵 경쟁으로 이어져 한반도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 분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과 관련,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핵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정부는 북핵 불용 의지를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일 준비를 해

야 한다.

행동으로 북핵 불용 의지를 보이려면 우선 우리 나름대로 명확한 원칙의 수립이 중요하다. 북한이 핵 보유를 공식선언한 이 마당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모든 남북교류를 계속할 수는 없는 일이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 남북간 교류협력은 현재 진행 중인 상태에서 동결하고 핵 문제 해결 이전에는 새로운 경제협력사업은 시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이 기대하는 만큼의 충분한 경제지원이 없으리라는 분명한 신호가 될 것이다. 최악의 경우 북한의 핵보유가 명백한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핵 가진 자와 손을 잡을 수 없다'는 원칙을 수용할 준비를 해야 한다.

둘째, 한국정부는 외교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흔들리지 않게 유지해야 한다. 즉,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번 외무성 성명으로 한-미-일 공조를 깨트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6자회담 참가국들이 더욱 일치된 목소리로 북한을 대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야 한다. 삼국 공조에는 북한인권법이나 확산방지구상(PSI), '자유의 확산' 등 구체적 사안과 추상적 원칙에 대한 공감대 확대도 포함된다.

북한은 세계유일의 비정상국가이다. 냉전이 끝난 지금 이 세상 어디에 내 돈을 내고 관광을 가도 철조망 쳐진 도로 밖으로는 한발짝도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국가가 있단 말인가? 지금 어느 나라에서 국가지도자의 생일이라고 온 국민이 충성서약을 하고 국가적 축하행사를 한단 말인가? 북한은 변해야 한다. 때문에 이제는 북한인권법이나 민주화 요구를 다른 주권국가에 대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오만하고 부당한 간섭과 압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북한을 서서히 민주국가로 변화시켜서 언젠가는 정상국가로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한국도 이에 동참할 준비를 해야 한다.

셋째, 6자회담과 병행하여 남북간의 직접 협상을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도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2002년 10월 2차 북핵 위기가 시작된 이래 사태진전을 되돌아보면 북한의 핵 보유는 점점 더 기정사실이 되어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힘써온 국제공조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이제는 북핵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할 때이다. 여하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군사력 사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전제할 때 한국이 택할 수 있는 대안은 '크게 주고 크게 받는다' 대타협을 시도하는 것이다. 만일 북한이 그러한 대타협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북정책의 근본적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북핵 대타협의 핵심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외부 지원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 북한 경제회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는 길을 찾는 것이다. 한국형 대타협은 빅터 차(Victor D. Cha) 방식

의 매과 포용과 오한런/모찌즈키(O'Hanlon & Mochizuki)의 대타협을 결합한 방식이 될 것이다. 이러한 대타협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계기가 필요하다. 우선 북한의 분명한 핵 포기 의사 표명이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현재의 경협규모를 뛰어넘는 지원과 제2, 제3의 개성공단 프로젝트, 그리고 국제컨소시엄을 통한 대북 지원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당근과 채찍'은 이제 북한에게 통하지 않기 때문에 '스테인크와 해머'의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그러한 대타협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햇볕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북핵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본질적 이유는 북핵 문제의 해법을 둘러싼 북-미 양국의 대립 때문이다. 최소한 상호신뢰의 결여는 북-미 대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북핵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미국의 북핵 시간표는 평양의 것과 다르다. 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보는 시각도 다르다. 좀 더 근저에는 핵을 생존의 수단으로 보느냐 아니면 국제테러의 수단으로 보느냐 하는 근본적 시각의 차이가 있다.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이며 '폭정의 전초기지'로 보지만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이 핵문제의 근원이라고 주장한다.

양측의 주장이 이처럼 평행선을 그리는 한 북핵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외무성 성명이 '회담참가 명분이 마련되고 회담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라고 단서를 단 것은 회담 재개에 대한 한 가닥 기대를 남겨두고 있다. 그 기대가 언제쯤 어떻게 실현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는 것이 현재로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2005년 2월 22일 미래전략연구원>